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2018. 10. 24.(수) 총 7매(본문5매)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김석기, 사무관 엄지희, 주무관 서민지 • ☎ (044) 201-3360, 3361
	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김영혜, 사무관 박선동, 곽인영, 신익승 • ☎ (044) 201-4531, 4479, 4533
<b>보 도 일 시</b>		2018년 10월 2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4.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드리겠습니다

- ◆ 24일 주거복지협의회 개최...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 절차 쉬워진다
- ◆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: 지원대상 직접 찾아가고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
- ◆ 주거지원 장벽 완화: 보증금 부담 낮추고 쉽게 알고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
- ◆ 신속편리한 주거지원: 필요할 때 바로 지원(상사긴급 지원)
- ◆ 김현미 장관, “정책 몰라 혜택 못 받는 수혜대상자 없도록 할 것”

□ 앞으로 취약계층·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,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‘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 방안’을 10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회\*에서 발표했다.

\* 주거복지협의회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한국감정원,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, “주거복지로드맵(’17.11.29)”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발굴 등을 목표로 운영 중(1차 ’18.1월, 2차 ’18.5월 既개최)

○ 이번에 발표한 “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방안”은 고시원, 숙박업소,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.

\* '16년 기준 37만 가구(통계청)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거처의 유형, 가구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('17.5~'18.6)로서 6,809가구에 대한 표본조사

-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(8%)인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
□ 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: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

〈 이렇게 바뀝니다 〉

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동대문구의 25만 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다.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·전세·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.

그런데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비 등 신청 절차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저렴한 보증금 50만원에 기존 월세수준보다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은 보다 나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.

- (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)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,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(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\* 전면 개편)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,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'주거사다리 지원사업'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\*\*도 '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.

\* 현재, 쪽방·고시원·여인숙·비닐하우스·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하여 매입·전세를 저렴한 보증금(50만 원)으로 우선입주 가능토록 운영

\*\* 비영리단체, 공공주택사업자,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대상 발굴부터 지원신청 및 서류작성,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지원하는 사업

## ② 주거지원 장벽 완화 :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.

### < 이렇게 바뀝니다 >

대구에 살고 있는 76세 주거급여 수급자 E씨는 2인가구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이며 주거급여 지원액을 초과하는 월세부담이 있는 상황이다. 향후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500만원의 목돈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였었다.

앞으로는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보증금 부담이 없고 주거급여로 총당되는 월세를 내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.

- (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)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(약 500만 원 수준)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(주거급여 수급자 대상) 및 매입·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(2년간)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.

## ③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: 필요할 때 바로 지원하겠습니다.

### < 이렇게 바뀝니다 >

고시원에 거주중인 20대 여성 A씨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입주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, 생업으로 바쁘다보니 모집 시기를 놓치게 되고, 다음 모집 시기까지 3개월여를 또 기다려야 했다.

앞으로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입·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.

- (공공임대 상시지원) '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'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(기존 분기모집)과 즉시지원(기존 3개월 이상 대기)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신속한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.

④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: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겠습니다.

〈 이렇게 바뀔니다 〉

노후된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의 허름한 고시원에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매우 비좁은 면적에 옆방의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하지만 역과 가까운 곳에 이만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참고 살고 있었다.

그런데, 옆 동네에 기존 노후화된 고시원을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·재건축한 매입임대주택이 건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예정이다.

- (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)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.

⑤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: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.

〈 이렇게 바뀔니다 〉

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8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동양육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었으나 퇴소 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막막함, 주변의 시선 등으로 결국 고시원과 여관방을 전전하게 되었다. 30만원에 달하는 고시원비도 큰 부담이지만 기술도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임시직을 전전하며 구직활동을 하다보니 장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막막한 심정이었다.

앞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동시에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받다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.

- (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)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(국토부) 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·지원서비스(복지부)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(19.하~, 240호 시범사업)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”면서,
  -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,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.
  - 이와 더불어,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,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,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.

- ※ 별첨1 : 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 방안
- ※ 별첨2 :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

##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<b>1.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</b>	
<b>1-1.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적극 발굴 및 확대</b>	
①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직접 발굴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②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면 개편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<b>1-2. 주거급여 대상자 지원 강화</b>	
①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	주거복지정책과 우종하 사무관(☎044-201-3358)
<b>1-3. 차상위 고령자 및 집은 있으나 소득 낮은 고령자 지원</b>	
①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 신익승 사무관(☎044-201-4533)
② 유주택 저소득 고령자 대상 연금형 매입임대	공공주택지원과 신익승 사무관(☎044-201-4533)
<b>2. 주거지원 장벽 완화</b>	
<b>2-1.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용가능성 제고</b>	
①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 도입	주거복지정책과 신익승 사무관(☎044-201-4533)
② 매입·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 도입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<b>2-2.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확대</b>	
①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급여수급자까지 확대	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(☎044-201-3341)
<b>2-3. 쉽게 알고, 신청 가능토록 홍보 강화</b>	
① 직접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한 홍보 실시	주거복지정책과 우종하 사무관(☎044-201-3358)
② 유사 복지제도 전달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	주거복지정책과 우종하 사무관(☎044-201-3358)

추진과제	추진일정
<b>3. 신속·편리한 주거지원</b>	
① 시급한 주거지원 필요가구 공공임대 상시지원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② 매입·전세 임대주택 지원 절차·기간 개선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③ 재해 피해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 주택 도입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<b>4. 주거환경 및 시설 품질 제고</b>	
<b>4-1.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편의 제고</b>	
①②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편의시설 비용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제공	주거복지정책과 우종하 사무관(☎044-201-3358)
<b>4-2.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지속</b>	
①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	공공주택지원과 신익승 사무관(☎044-201-4533)
②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속	도시재생과 백선영 사무관(☎044-201-3733)
<b>4-3. 최저주거기준 개선</b>	
①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	주거복지정책과 좌명한 사무관(☎044-201-4740)
<b>5.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</b>	
<b>5-1. 주거·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</b>	
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주거·복지 통합서비스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② 관계부처·공공기관·지자체 협업 ① 커뮤니티케어와 주거지원 연계 ② 영구임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③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	①② 주거복지정책과 우종하 사무관(☎044-201-3358) ③ 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<b>5-2. 민·관 협력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</b>	
① 주거복지재단 기능 강화	주거복지정책과 엄지희 사무관(☎044-201-3360) 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
② 운영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	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044-201-4479) 신익승 사무관(☎044-201-4533)
<b>5-3.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한 전달체계 강화</b>	
①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	주거복지정책과 우종하 사무관(☎044-201-3358)